

“320만명 소상공인 애환 알기에 국회 첫 작품은 소상공인복지법”

인터뷰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이례적이긴 하지만 첫 법안을 준비하면서 300명 의원들께 직접 연락을 드렸다. 지난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될 당시 소상공인복지법을 후속법안으로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표들도 많은 공감을 표했던 만큼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출신으로,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했던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 입성,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이다.

최 의원은 1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돼 처음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기본권과 생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관련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일일이 선배·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가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는 같은 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 무소속 등 여야를 막론하고 51명이나 동참했다.

다만 아쉬움도 있었다. 연합회장 시절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정책을 독자적으로 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뛰 어다녔던 그였기에 의원이 돼 직접 발의한 관련 후속법안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같은 당에선 소상공인복지법을 놓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로 보거나, 또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었다. 여당은 또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할 하면서도 당내에서 별도의 유사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더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함께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최근 소상공인 기본권·생존 부각 의원 300명에 일일이 중요성 알려 통합·민주당 등 의원 51명 동참

사회보험료·생계비 지원근거 담아 소상공인 치킨 판매 그대로인데 배달앱만 돈 버는 구조 문제있어

‘룰’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에 흠여져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하나로 모은 소상공인복지법은 전체의 85%로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실제 2018년 전산업기준 사업체수 381만723개 가운데 소상공인은 323만 6238개로 전체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복지법에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이 특별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면서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공제조항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해 3년마다 ‘소상공인 복지 기본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이 직전에 회장을 맡았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소상공인복지법 발의와 관련한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면서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 코로나 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은 최근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독일계 딜리버리허어로(DH)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간 기업결합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유심히 지켜볼 작정이다.

최 의원은 “기업결합을 현행법으로 막을 순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자본의 결합 문제만 놓고 심사를 하면 안된다. 소비자의 복지, 산업 발전 가능성, 독과점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도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파는 치킨 숫자는 전혀 늘지 않았는데 배달앱이 벌어들이는 돈만 늘었다면 그게 문제다. 소상공인들을 과다경쟁시키고, 수수료만 빼먹고, 마케팅을 통해 깃발만 쫓는다면 배달앱은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약탈적 회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KT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음식 배달 시장의 경우 1·4분기 기준으로 2017년 당시 약 5000억원에 그쳤던 것이 올해 들어선 약 3조5000억원으로 7배나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광주특구 첨단3지구에 AI 연구 산업단지 조성

과기정통부, 개발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특구 미개발지인 첨단3지구 내에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중심의 연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발계획은 주민공청회,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등을 거쳐 제33차 연구개발특구 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다음주 내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첨단3지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361만6,853㎡에 이르는 미개발지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첨단1, 2지구의 뒤를 이어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연구·산업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전체의 약

32.9%(119만1000㎡)가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를 포함한 연구·산업용 지로, 17.4%(62만8000㎡)가 주거및 상업용지로 공급되며, 공원녹지 등 기반 시설 부지가 49.7%(179만8000㎡)인 친환경 복합단지로 계획됐다.

문재인 정부 광주 지역공약인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인접한 지역에 배치해 우선 추진하고, 주변 지역에 정보통신,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학·연 클러스터가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용지 중 제조업 용지는 광주광역시 11대 대표산업 등을 고려해 연구, 광기반융복합, 스마트케어가전, 차세대전지, 나노산업, 의료산업 등을 유치업종으로 계획했으며, 전체 산업용지면적의 12.6%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18일 경기 포천시청에서 진행된 ‘포천형 내일채움공제 협약식’에서 (왼쪽 4번째부터)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박윤국 포천시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포천 中企근로자에 내일채움공제 지원

중진공-포천시, 사업지원 협약

경기도 포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포천시와 ‘포천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진공과 포천시는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의 유입을 지원하는 포천형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고, 포천시 지역경제에 활력 제고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진공은 협약에 따라 사업 안내와 가입 지원, 지원대상 기업 모집, 선정,

청약접수, 계약관리를 진행한다. 포천시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비 확보와 사업 홍보 및 수요 발굴 등을 수행한다.

앞서 중진공은 지난 5월 포천상공회의소와 협업체 포천시 중소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필요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전해 받은 포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포천형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적극 화답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박윤국 포천시시장, 조용훈 포천시의회 의장, 이민형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승호 기자

산업부,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기술 찾는다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개소

정부가 특허 분석에 기반한 미래 유망기술 발굴과 육성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허청과 함께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개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 세계 4억5000만건의 특허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경쟁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방향을 진단·예측할 수 있고, 우리 연구개발 방향, 투자방향,

시장진출 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다.

특허청은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미래형자동차 등 17대 신산업, 조선·화학 등 10대 주력산업,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해 산업별 특허동향 모니터링·분석, 위기신호 탐지 등과 함께 유망기술 발굴 등 산업별·기술별 핵심 정보를 생산해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대 분야에 이어 올해는 AI, IoT가전, 신재생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무인비



박원주 특허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체 등 5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미래 유망기술 등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혁신전략을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hys@

산업부, 수입합판 반덤핑 조사 공청회

베트남·중국산 등 4건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 조사와 관련 이해관계인의 직접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반덤핑 조사 대상은 베트남산 합판,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 등 4건이다.

합판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건설업, 조선업, 가구산업 주요 원자재이며, 유사시 시설피해복구 등을 위한 필

수자재로 지속적·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중요 물자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만㎡) 수준으로, 베트남산이 약 40~50%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중국산과 말레이시아산 약 10%, 국산품은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앞서 무역위는 예비판정을 통해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봤다고 보고 지난 5월 29일부터 베트남산 합판에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용수 기자